



2018 04 03 ( )

---

1.	“ 가 ” -	. . . . .	3
	> 01		
2.		. . . . .	4
	> 03		
3.		. . . . .	4
	> 03 ...		
4.		. . . . .	5
	> 01		
5.	地選 ‘ ,	. . . . .	5
	> 03		
6.		. . . . .	6
	> 03		
7.		. . . . .	7
	> 03 ‘ ,		
8.	‘ ,	. . . . .	7
	> 01		
9.	1	. . . . .	8
	> 01		
10.		. . . . .	9
	> 01		
11.	, 가	. . . . .	10
	> 02		
12.	”	. . . . .	11
	> 02		
13.	12 ...	. . . . .	12
	> 03		
14.		. . . . .	13
	> 01		
15.	GM 1	. . . . .	14
	> 02		
16.	'3 ' 가	. . . . .	14
	> 04		
17.		. . . . .	15
	> 01		
18.	‘ 3 ,	. . . . .	16
	> 01		
19.	“ ”	. . . . .	17
	> 01		
20.	4 . ‘ ,	. . . . .	17
	> 03		

21.	>	05		. . . . .	18
22.	GM	'	,	. . . . .	19
	>	01			
23.	>	02		. . . . .	19
24.	>	03	- ...	. . . . .	20
25.	>	, 03		. . . . .	20
26.	'	,		. . . . .	21
	>	03			
27.	GM	"	"	. . . . .	22
	>	02			
28.	"GM,	,	"	. . . . .	23
	>	01			
29.	>	02	,	. . . . .	23
30.	>	03	, 가 ' '	. . . . .	24
31.	>	03	, 22	. . . . .	24
32.	>	03		. . . . .	25
33.	" " ' ,		"	. . . . .	25
	>	03			

# “내가 도지사후보 적임자”

## 송하진-김춘진 공천 면접

〈민주당〉

송하진 “정부와 함께하는 도정”

김춘진 “전북 새 리더십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사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송하진 지사와 김춘진 전 전북도당 위원장 등에 대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 정성호의 도지사 공천신청자 면접이 2일 오후 3시50분부터 후보 별로 10분씩 진행됐다.

두 신청자는 도지사 출마 및 전북 발전 비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접은 김춘진 전 위원장이 오후 3시47분에 면접에 들어가 3시58분에 끝났으며 이어 송하진 지사가 3시59분부터 4시10분까지 면접에 들어가, 두 인사는 이날 면접장에서 마주치지 않았다.

먼저 면접을 마친 김 전 위원장은 면접에서 “새만금 잼버리 유치 등 송하진 지사의 공적이 크지만 현재 전북의 경제 현황이 좋지 않은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면접 시간 대부분을 새만금 등 도내 주요 사업 개발 방향에 대해 말했고 국회의원 3선과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의 힘 있는 도지사론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면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에 전북도민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고, 새만금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는 전북도정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특히 행정전문가로서의 장점을 강조했고 3명의 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송 지사는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와 전북 발전 방안에 대해 차분하고 진지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면접은 전북지사 공천신청자 2명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관위는 지난 달 31일까지 후보별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마쳤으며 당의 본 경선은 오는 22일 이전에 마무리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 도내 여야 지선 온도차 극과 극

## 민주당 후보접수만 350명 공관위 결선투표설 부인 야당 후보찾기 대책 논의

6.13 전북 지방선거 분위기가 여야 정당별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유력 후보가 넘쳐나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급증’, ‘후보 난립’의 행복한 비명 속에 후보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후보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도내 야당은 국회의원 긴급모임 등을 갖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2일 여야 정당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2일 전북지사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천신청자 면접을 실시했다.

송하진 현 지사와 김춘진 전 전북도당위원장 등 2명은 이날 오후 3시50분부터 10분씩 면접을 봤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공천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당은 시장군수, 도의원 등에 대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에 들어갔

으며 이번 주 토요일 안에 여론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어서 각 후보자 캠프는 초비상 속에 여론조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당은 또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자 면접 일정도 잡았다.

지방의원은 오는 6, 7일 그리고 기초단체장 후보 면접은 오는 7일 군산, 익산, 완주, 임실 단체장 후보 그리고 8 일에는 정읍, 고창, 진안, 무주, 장수, 부안, 남원, 김제, 순창, 전주 선거구다.

일각에서 제기된 도내 일부 기초단체장 결선투표설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식 부인했다.

공관위 대변인인 이재훈 교수는 “지난 달 31일 공관위 회의를 열었지만, 이 건은 회의에서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고 검토하지 않았다. 안건에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경우 이미 정해진 공천 방식을, 경선 관련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변경할 경우 후보자간 이해가 상충한다는 점에서 공천 후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기초단체장 면접 일정〉

면접시간표(안) 4. 7(토)		
선거구	면접	면담
군산 단체장	5	장성욱, 장영준, 문택규, 박재관, 이재호
익산 단체장	6	김대용, 김성훈, 김일배, 전완수, 황현, 김현욱
완주 단체장	3	김일, 박성일, 유희태
임실 단체장	4	박성수, 이갑길, 전상두, 한영락

  

면접시간표(안) 4. 8(일)		
선거구	면접	면담
정읍 단체장	7	김석훈, 임영재, 우현규, 유건섭, 이상욱, 이학수, 한영규
고창 단체장	3	이호근, 장영식, 박우정
진안 단체장	2	김현철, 이항로
무주 단체장	3	박영태, 서필로, 황정수
장수 단체장	4	정성민, 오재관, 이영숙, 장영수
부안 단체장	4	권익현, 김성수, 김인수, 서주필
남원 단체장	3	윤승호, 이상현, 이광호
김제 단체장	8	박우배, 신성호, 오영환, 유대희, 이종규, 정호영, 장동훈, 나유민
순창 단체장	2	장승일, 황우주
전주 단체장	2	김영수, 미현용

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 기회가 거의 없다는 지적 속에 2일 익산에 이어 오는 6일에는 김제지역 7 일에는 고창지역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마감한 민주당 전북도당의 후보 접수 결과는 기초단체장 57명, 광역의원 68명, 기초의원 225명 등이 신청해 총 350명이다.

야당인 민주평화당은 후보군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5명은 이날 모임을 갖고 도지사 후보 및 후보자 선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박주현 의원과 채수찬 전 의원에 대한 영입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도내 의원들이 이들 인사와 면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22.3\*14.9)cm

# 지방의원 줄사퇴... 의정공백 현실화

## 도의회 선출직 44%사퇴에 시·군의회도 ‘개점휴업’ 대부분 내달 임시회 계획 없어... 상임위 활동지장

6·13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의회와 일선 시군의회의 의정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들의 기초단체장 도전이 러시를 이루면서 전북도의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이다.

2일 전북도의회와 시군 기초의회, 정치권에 따르면 각 정당의 6·13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6월 선거까지 의회 활동이 축소·운영된다.

전북도의회와 일선 시군의회는 통상적으로 매년 9월과 11월 정기회를 개최

하고, 매월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당내 경선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은 임시회가 대부분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전북도의회는 4월 임시회를 3일 밖에 잡지 않았다. 이마저도 공식인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하루를 쓰고, 남은 이틀간 10여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5월에는 임시회를 열지 않기로 했고,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18일 임시

회를 열 계획이다. 일선 시군의회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전북도의회와 일선 시군의회가 이 기간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의원들이 대부분 선거에 출마하며 지역 표발을 누비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도의회는 이 같은 현상이 과거보다 심화된 상황이다.

현역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또는 불출마로 무주공산인 지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의원들의 사퇴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현재까지 비례대표를 제외한 34명 도의원 중 13명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또 이번 주 중으로 2명이 추가 사

퇴할 예정이다. 선출직의 44%가 사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의회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 무주공산 지역이 대폭 늘어나고, 도의회 의석 비율이 특정정당 소속에서 다양화되면서 의원들의 사퇴 폭이 과거보다 큰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의정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 선거가 시작되면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의정공백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의원들도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영민 기자

(24.0\*11.4)cm

01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추진 속도전

이달 중 사전 타당성 검토  
건설비용-입지 확정 될 듯  
군산공항 이용객증가 '긍정'  
균형발전차원 예타면제과제

새만금 국제공항이 이번 달 중 사전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내, 국제공항 개항에 대한 기대감 커져가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비용과 경제성, 공항 위치 등을 분석하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5억 원이 지난달 말 국토부 예산으로 배정됐다.

이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은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과

용역계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만간,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사업비 확정과 편익 등의 산출은 물론 경제성과 정책적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항 입지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효용가치 등에 대한 토론도 마친, 공항의 입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기재부에 잡혀있던 5억 원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이나 시급성 등이 고려돼 기재부가 수시배정 예산을 배정하기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군산공항의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다, 노선까지 증편시켜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된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

더라도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공항을 개항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기지로 키우는 것은 물론 전 세계 168개국에서 4만 명이상이 참가하는 잼버리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하면 빨라야 2023년에 착공할 수 있어 잼버리대회 이전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속도전 약속과도 배치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자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자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6단계가 된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조항이 있는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예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어서, 국제공항을 개별 사업에 예타로 추진하는 것이 이중규제 아니냐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나왔던 만큼, 예타 면제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이제서야 착수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조사도 끊임없이 중앙부처와 소통해 면제 또는 축소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2023년 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공항이 개항돼 잼버리대회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22.8\*12.6)cm

03

# 민주 전북地選 여성공천 '생색내기'

전북이 여성 정치참여의 사각지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당헌에 여성의무공천을 명시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 공천 현실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박희승 공천관리위원장은 1일 전북지역 공천과 관련 "도당 공관위원 절반에 가까운 9명이 여성"이라며 "앞으로 있을 공천 심사에서 여성과 정치 신인에 대한 평가를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8조는(성 평등 실현)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라며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서 30%를 여성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했다.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기초의원 10% 남짓 접수  
최종 경선 통과자는 훨씬 적을 듯... "실천적 노력"을

당헌과 전북 정치권 인사들의 잇단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지지와 달리 전북 지선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정치적 비중이 큰 광역의원 후보를 여성으로 의무공천 하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은 기초의원을 여성후보로 내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지난 30일 마감한 민주당 도당의 지선 후보 접수결과는 전북에서 여성 정치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던 기초단체장 후보 접수한 57명 중 여성 후보는 장수군수 선거에 나온 이영숙 전북도당 지역경쟁력강

화특별위원장이 유일하다.

이번 6·13 지방선거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7차례 진행된 지선에서 민주당에서 단체장 후보로 여성이 나선 것은 이영숙 위원장이 처음이다.

또 68명이 접수한 광역의원은 여성 후보가 7명이지만 전주 9선거구에서 국주영은 의원이 단독 접수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지역은 경선을 치러야 할 형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들 여성 후보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전북은 여성 정치의 '암흑시대'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또 225명이 후보 접수한 기초의원도

여성후보는 불과 10% 남짓한 30명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에 여성후보 지원을 당에 요구한 것도 전북 정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 자리에서 남일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사회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투'의 본질은 권력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의 과잉대표로 인한 성차별과 성불평등 개선을 위해 당이 실천적 노력을 공천결과로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건의서 내용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고위원회 의결로서 지침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24.0\*13.4)cm



# 민주여성 의무공천 기대이하

민주당 전북도당은 의무공천에 소극적 비판 제기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 1명, 광역의원 신청자도 7명에 그쳐

기초의원 공천 신청 여성 후보자 31명, 전체 후보 중 10% 약간 상회  
전주를 지역 광역의원 여성 후보 등록 지역 관련 논란 확산

서울=강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남성은 물론 여성 후보들까지 민주당 공천 신청 대열에 합류하면서 제 7회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의 약진이 기대된다.

지방정가는 민주당 당헌과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여성 의무공천 제도를 바탕으로 여성 후보들의 지방 의회 및 기초단체 진출을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여성 후보에게 20%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경쟁력이 담보될 경우 여성 후보가 비교적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공직후보자 관리 및 심사를 총괄하는 전북도당이 여성 의무공천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조짐이다.

지난 30일 접수 마감된 공천 후보자 신청 결과 기초단체장 후보 57명 중에서는 이영숙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유일했다. 광역의원 후보 역시 현역 도의원인 국주영은 의원과 오정화 시의원, 김이재, 이화숙 후보 등 7명에 그쳤다. 여성 후보들은 주로 기초의원 선거에 몰려 총 31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마저도 기초의원 남성후보 216명에 비하면 1/7 수준에 그쳤다.

여성 후보들이 기초의원 선거에 몰리는 것은 의원 정수가 많아 공천과 함께 우선 순번 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면에는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5항 때문에 여성의 정치 참여 확산 차원에서 마련된 여성 의무공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높다. 이 조항에 따라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 공천한 지역에서 여성후보 1명을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

자 등록은 무효 처리된다.

달리 해석하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방의원 후보 1명 이상만 여성으로 공천하면 되는 탓에 각 지역위원회 뿐 아니라 도당은 생색내기용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에 여성을 공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의 위상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현장에서 뛰는 여성 정치인들의 하소연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여성 후보가 1명에 그치고,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가 전체 76명 중 9%에 불과한 현실이 단적인 예다.

특히 전주를지역 광역의원 4선거구에 김이재 한기표 후보가 공천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상직 현 지역위원장은 여성인 김 후보를 배려, 여성의무공천 대상자로 고려하고 있지만 한 후보는 경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로케도 한 후보는 이상직 위원장과 지난 총선에서 경쟁한 최형재 노무현재단 전북지역 위원회 공동대표의 측근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에 대해 원칙론을 견지하는 분위기다. 도당 관계자는 “기초의원 선거구에 여성 후보가 단수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전주 광역 4선거구가 여성 의무공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지역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략공천을 요청할 경우, 공관위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9\*13.9)cm

03

## 민주 광역단체장 단수공천 ‘고민되네’

### 전북 양자대결에 후유증 예고

6·13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지사와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이 2일 중앙당 면접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평가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반 경선 여부를 가릴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정치권은 광역단체장의 결선투표 도입과 단수공천 적용을 공천의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서울, 경기지사 경선은 결선투표가 공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태풍의 눈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 지역은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큰 것으로 전해져 단수공천 기준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

다. 결선 투표제는 1위 후보자가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자 간 재결을 벌이는 방안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꾸준히 제기 됐다.

그러나 결선투표와 반대로 양자대결 구도의 전북과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큰 지역은 단수공천 적용을 둘러싸고 한바탕 흥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관위는 “여론조사 결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예비후보들의 내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관위 측은 “여론조사 결과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 단수공천을 할 수 있다”며 “현격한 격차”의 구체적인 수치는 당 지도부의 정무적인 판단을 결들

여 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20%p 차이가 날 경우 단수공천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다.

공관위 입장대로라면, 단수공천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내부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고 다독이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보주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공관위의 방침과 달리 경선을 진행할 경우에도 우려는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후보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지와 이들이 후보주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냐고 반발할 경우 해당 사안을 정리할 수 있을 지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 공관위가 ‘공정, 공평, 공개’ 심사원칙을 밝힌 만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확한 심사기준을 먼저 알리고 여론조사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17.3\*10.3)cm

## 全北日報

2018 04 03

01

## 익산 쌍릉 ‘판도라 상자’ 열린다

100년만에 발굴 재개, 왕릉급 실체 일부 드러나  
대왕릉 내부에서 인골 가득 담긴 나무상자 발견  
전형적인 백제 사비기 굴식돌방무덤 방식 확인

익산시 석왕동에 위치한 익산쌍릉(사적 제87호)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일제강점기 조사 이후 100년 만에 재개된 발굴조사를 통해 익산쌍릉이 왕릉급 무덤임에 힘을 실어주는 실체들이 일부 드러났다.

2일 익산시와 문화재청, 발굴조사단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등에 따르면 익산쌍릉은 부여에서 익산으로의 천도를 추진한 무왕(재위 600~641)이 묻혔다고 전하는 복록의 대왕릉과 그의 부인인 선화공주가 묻혀 있다는 남쪽의 소

왕릉이 나란히 조성된 원형 봉토분(묘)으로 대왕릉 내부에서 인골이 담긴 나무상자가 나왔다.

쌍릉 대왕릉에서 현실(玄室·시신을 넣은 날이 안치된 방, 무덤방)의 가운데에 있는 화강암 관대(棺臺·관을 얹어놓는 넓은 받침) 위쪽에서 인골이 있는 상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근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나무상자는 가로·세로 각 26cm이며, 높이는 33cm로 안에 인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인골은 1917년 쌍릉을 발굴한 야스이 세이치(谷井濟一)가 관과 토기, 장신

구, 치아 등을 수습한 뒤 무덤 주인공의 인골을 모아 다시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들은 “무덤 주인공의 인골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인골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향온합승실에 보관돼 있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옮겨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봉분 직경이 약 25m, 높이가 5m인 대왕릉의 내부 구조와 규모도 확인했다.

구조는 백제 사비도읍기의 전형적인 횡혈식 석실분(橫穴式石室墳·굴식돌방무덤)으로, 입구가 중앙에 있고 현실은 육각형으로 나타났다.

현실 크기는 길이 378cm, 너비 176cm, 높이 225cm다.

이는 1979년 일본 고고학자 아리미쓰

교이치가 제시한 실측도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백제 왕릉급 무덤이 모여 있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현실이 가장 큰 무덤인 동하총보다 더 넓은 것이다.

무덤으로 통하는 길인 연도는 길이 67cm, 너비 125cm, 높이 156cm로 조사됐다.

관대는 길이 268cm, 너비 82cm, 높이 24cm다. 관에서 떨어진 것으로 짐작되는 금박이 일부가 남아 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현실 조성 과정에서 대형 화강암을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 사용하고, 사비도읍기 백제 왕릉급 무덤 중에는 처음으로 흙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판축기법으로 봉분을 만들었다는 점도 규명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대왕릉은 규모나 구조 면에서 왕릉급 무덤이 확실하다”며 “무덤 주변에 제사 행위 흔적 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변을 더 조사할 것



익산 쌍릉 조사 후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

이다”고 설명했다.

익산쌍릉은 향가 ‘서동요’에 등장하는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가 묻혀 있다고 전해지는 무덤이다.

하지만 익산 미륵사지석탑 사리불안기에 무왕의 부인이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이라고 기록돼 있고, 대왕릉에서 발견된 치아를 분석한 결과 20~40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피장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쌍릉은 야스이 세이치의 발굴조사 이전에 도굴된 상태였으며, 관을 비롯한 출토 유물 일부는 국립전주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익산=엄철호 기자

(30.1\*13.1)cm

# 군산 상반기 실업자 1만여명 나올 듯

고용정보원, 군산GM 폐쇄 여파 분석  
제조업 고용감소, 산업 전체 영향 우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군산시의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악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시는 올 상반기에만 실업자 수가 1만 여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군산시 고용동향과 이직자의 일자리 이동 특

성'에 따르면, 군산시의 2017년 하반기(7월~12월)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52.6%로 나타나 154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는 52.1%를 기록한 익산시다.

군산지역 고용률은 전년 동기(2016년 7월~12월) 55.1%에 비해 2.5%p 하락했으며, 취업자수는 2016년 하반기 12만

8900명에서 지난해 하반기 12만2500명으로 줄었다. 1년 새 6400명이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업자수는 2100명에서 3100명으로 늘었다. 실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실업률(15세 이상 인구 중 일자가 없어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큰 폭으로 올랐다. 군산시의 실업률은 2016년 하반기 1.6%를 보이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2.5%로 상승했다.

이러한 고용지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 군산지역 노동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5월말에 완전히 폐쇄되면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올 상반기 실직 인원이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군산지역 제조업 가운데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관련된 자동차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 군산시 자동차 제조업의 지난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수의 21.7%를 차지한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가 자동차 산업 외에 다른 제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고용정보

원은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큰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군산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군산시 지역내총생산(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은 지난 2011년 대비 17.2%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에서 군산시의 고용률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정보원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 없이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며 "안정적인 지역 경제와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보트업 등 제조업의 가동 재개와 다른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세희 기자

(30.1\*9.1)cm



01

# 새만금 공항 입지 연내 마무리 기대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5억원 배정  
도, 국토부에 조기 완료 요청키로

## ▶ 관련기사 2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만금공항 건설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배정이 확정돼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에 수시 배정 예산으로 묶여있던 새만금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이 지난달 말 국토부에 배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거쳐 사전타당성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새만금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과 용역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총사업비 확정과 편익 등을 산출해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 어디에 공항을 배치해야 가장 효율 가치가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해 입지도 확정하게 된다.

도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항공수요조사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까지의 소요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새만금공항 신속추진 로드맵(안)을 마련했다.

도의 신속 추진 로드맵(안)에 따르면 1년이 소요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연내(9개월) 마무리하면 공항 입지까지 올해 안에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도는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도 정부에 요청해 2023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새만금공항 개항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새만금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될 수 있게 된 만큼 사전타당성조사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앞으로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조사도 중앙부처와 소통해 면제 또는 축소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새만금공항이 개항돼 잼버리대회 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원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예타면제가 관건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있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 배정을 확정하면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만금공항 건설의 당위성 및 시급성이 고려돼 기재부가 지난달 말 수시배정 예산을 배정하기로 확정된 것이다.

새만금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2016년 5월)됐으며, 국토교통부는 2016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추진해왔다. 항공수요조사 용역은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용역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계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사전타당성조사(소요기간 1년)를 착수하게 된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1년)와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2년), 공항건설 및 시범운영(4년)까지의 단계가 남아있다. 새만금공항 건설(2026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적어도 9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2023년 세계캠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새만금공항을 조기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도의 계획대로 새만금공항 조기

**캠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완공할 계획  
김제공항 추진 때 모든 행정절차 완료  
도, 신속추진 로드맵 마련…6년 소요**

설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관건이다.

이에 도는 새만금공항 건설은 신규사업이 아닌 김제공항 건설의 연속사업으로, 이미 김제공항 추진 때 모든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2023년 세계캠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새만금공항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조만간 국토부가 추진할 사전타당성조사가 연내 마무리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돼야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군산공항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시기를 재검토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었던 점에 비춰 현재의 새만금공항 건설은 공항 설립 장소만 김제에서 새만금으로 바꾸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는 새만금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신속 추진 로드맵(안)을 마련했다.

도의 신속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수요조사가 이달 안에 끝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12월 말까지 진행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1년6개월), 공항건설 및 시범운영(2년) 등을 거쳐 2023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공항이 도의 신속 추진 로드맵대로 추진되면 공항 건설까지 약 6년이 소요된다. 2023년 세계캠버리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도가 계획대로 새만금공항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정원 기자

(36.2\*12.4)cm



한국지역고용학회와 전북연구원, 전북노사민정네트워크포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 단체가 2일 열린 ‘한국GM 군산공장 위기극복과 지역 고용·산업정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엠 관련 퇴직자들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연구원

## “태양광 협동조합 설립해 지엠 퇴직자 창업지원을”

**한국지엠 군산 위기극복 토론회  
“새만금 유휴부지 활용해  
태양광 창업·전업 교육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의 재기를 위한 발판으로 정부가 새만금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역고용학회와 전북연구원, 전북노사민정네트워크포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6개 단체는 2일 ‘한국GM 군산공장 위기극복과 지역 고용·산업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엠관련 퇴직자와

군산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장단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김현철 군산대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대기업 공장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체제에서 벗어나야 지역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대기업-협력업체’ 체제를 뒤엎어 자생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해고노동자에게 태양광 설비 시공기술을 교육하고 기초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후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유도해 창업 및 전업을 위한 준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태양광발전 부지는 새만금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된다”며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는 유휴공간을 무상임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태양광 발전을 제시한 근거로 미 노동성 통계국의 통계를 들었다. 미 노동성 통계(2018)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 시공기술자는 오는 2026년까지 빠르게 증가할 직종 1위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이 방안은 효과적으로 전업할 수 있게 도와주며, 불로소득이 아닌 전문기술에 기초한 직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며 “향후 태양광발전전기를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세희 기자

(18.0\*20.8)cm





강동룡 강병진 나경균 나유인 박준배 신성욱 이홍규 유대희 오병현 장을규 정성주 정호영

## 입지자 무려 12명... 중앙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론 급부상

### 6·13 지선 판세 짚어보기

#### ● 김제시장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김제시장 자리를 꿰차기 위한 입지자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총 12명의 입지자 가운데 현재 10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심잡기에 들어갔다.

나머지 2명(강병진·나경균)도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장 자리는 이건설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잃으면서 무주공산이 돼 일찌감치 선거 바람이 불면서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

현재 김제시장 자리를 노리는 입지

이건설 시장 낙마에 무주공산 민주8·평화2·무소속2 각축

자들은 민주당 8명을 비롯해 민평당 2명, 무소속 2명 등 총 12명이 저마다 자신이 적격자임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먼저 민주당의 경우 강동룡·나유인·박준배·신성욱·이홍규·유대희·오병현·정호영 예비후보(가나다 순) 등 8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이번 주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우선 3배수 안에 들기 위해 피터지는 혈전을 펼치고 있다.

강동룡 후보는 도·농간 조화있는 기업유치 통해 소득과 일자리 창출 및 김제를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나유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종교·문화·관광테마 등을, 박준배 후보는 시장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김제 인재육성, 농특6

차산업으로 발전시켜 한·중 FTA 위기 문제 해결 등을, 신성욱 후보는 국내 1위 상품 33개 발굴 육성 및 스마트 특장차 벨리 조성, 말산업 클러스터와 김제 가치 10배 올리기 등을, 이홍규 후보는 효도 일등도시 김제 및 시민 참여도시 김제, 새만금개발청 김제 이전 등을, 유대희 후보는 세계농업 EXPO 박람회 개최 및 농촌체험·체류형 도농복합 관광도시 건설, 새만금 중심 21세기 거점도시형 MICE(마이스) 사업 추진 등을, 오병현 후보는 벼농사 중심에서 탈피, 특용작물 면 단위 재배 및 7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목욕권 및 긴급택시 이용권 각각 1만원(합 2만원) 제공 등을, 정호영 후보는 새만금 신항만 행정구역 김제관할귀속 추진 및 벽성대 캠퍼스 특성화 대학 유치 추진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평당 강병진 후보는 각 읍·면·동별 특화사업 단지 조성과 노인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인구유입을 위한 특

단의 정책 추진 등을, 정성주 후보는 새만금 내부개발 지역 김제시 행정 귀속 및 김제역사 이전,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 김제시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표발을 다지고 있다.

무소속 나경균 후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및 KTX 부역역권 건설, 도심권 재생사업 추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을 내세웠고 장을규 예비후보도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고 표심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판세는 3강 4중 1약, 민평당은 1강1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무소속 나경균 후보는 최근 모 정당에서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최근 중앙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론이 급부상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김제=최대우기자

# 새만금국제공항 추진 탄력 타당성 조사 후 입지 확정

**기재부 용역비 5억원 배정, 道 이달말 조사용역 발주  
공항입지·사업비 등 윤곽... 예타면제·공기단축만 남아**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예산 족쇄가 풀리면서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 완공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5억원) 수시배정 예산 배정을 확정, 이번달 용역 발주가 가능해졌다.

추후 예비타당성 면제와 공사기간 단축 등 패스트트랙(신속추진방안)이 적용된다면 2023년 개항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배정을 최종 확정, 국토교통부에서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6년 5월)에 반영돼

국토부에서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다.

이후 기재부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억원을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해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됐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 문제가 해결되자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과 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계약 등 신속한 행정절차에 집중할 방침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 확정 및 편익 등을 산출해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공항 배치에 따른 효용가치의 전문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공항의 입지도 확정하게 된다.

도는 공항 부지 확보를 두고 예상되는

과열 경쟁 문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국토부 용역 결과를 수용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을 위해선 예타 면제와 공기 단축이라는 과제만 남아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지난 2006년 잠정 중단된 김제공항의 연장선으로 부지만 재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기재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타를 최대한 축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 설계, 건설 등은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확신한다.

송하진 지사는 "2023년 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국제공항이 개항돼 잼버리 대회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17.3\*16.3)cm



# 군산GM 사태 실직자 1만명

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분석’… 올 상반기 6천~1만명 추정  
조선·자동차 연쇄 폐쇄 충격과 막대 “정부차원 대책을”

한국 GM 군산공장이 폐쇄하면서 올 상반기(1~6월) 군산지역 실직자가 최대 1만명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군산지역은 지난해(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실직자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로, 실업대란이 가속화 될 조짐이다.

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올 상반기 군산지역 실직인원은 6천 명에서 1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희망퇴직과 계약해지, 폐업 등을 총 망라한 인원이다. 정보원은 군산공장 폐쇄로 부동산과 지역상권, 서비스 산업 등이 침체하거나 폐쇄하면서 실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와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진단이다.

실제로 정보원은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8천 명의 취업 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군산지역은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천 명이, 상반기 대비 8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군산지역 내 일자리가 감소한 결과다. 군산지역 일자리 수는 지난해 하반기 12만 6천 개로 전년대와 비교해 6천 개(4.9%) 줄었다. 이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이 분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은 2016년 7월 2천906명에서 지난해 7월

400명까지 감소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함께 연관 산업이 동반 쇠락하면서 일자리 숫자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정보원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파장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군산지역 실직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보원은 군산공장 폐쇄 장기화로 선박 및 보트 건조업과 마찬가지로 군산지역 내 재취업의 어려움과 타지역으로 유출이 심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타지역 유출은 소비 부진 등과 연결돼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군산시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종사자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종사자보다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훈 기자

(17.6\*13.3)cm

# 전주시장 민주당 경선 ‘3대 쟁점’ 가열

김승수·이현웅 예비후보 뜨거운 접전속 공방전 예고  
종합경기장·대한방직부지 활용안·봉침사건 첨예대립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당내 경선을 코앞에 두고 3대 쟁점포인트가 경선 연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는 김승수, 이현웅 두 예비후보가 뜨거운 접전을 펼치며 본격적인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전주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대한방직 부지 활용안, ▲봉침 사건

등 ‘3대 키포인트’가 전주와 지역사회를 뜨겁게 회오리치고 있다.

먼저 전주종합경기장 사업은 도 감사에서 양해각서 불이행 사유를 지적받은 후 터덕거리는 모양새고, 대한방직 부지 활용은 그동안 김승수 시장 재임 때 보존을 주장하다 지난달 한발 물러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봉침사건은 최근 고발과 기자회견 등으로 비화되며 오히려 ‘잡잡하던 시냇

물에 바위를 던진 격’으로 확대되 여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재개발 사업문제는 전주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한 전북도가 이 사안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면서 선거를 앞두고 수면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 경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전북도와 전주시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던 종합경기장 문제를 재차 끄집어 낸 것이다.

물론 전북도는 종합경기장뿐 아니라 전주시 첫 마중길사업도 함께 지적했다. 익산시의 감사결과도 발표해 하나의 사안만을 지적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북도 역시 “특정감사면 몰라도 정

기감사는 3년 터울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전주와 익산시가 지난해 말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발표한 것 뿐이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또, 대한방직 부지활용도 전주시는 그간 아파트나 상업시설로 이용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으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핵심은 현재 공업지역을 상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만큼 향후 특혜시비 논란이 일 수 있다. 봉침사건은 최근 유력 인물 20여 명의 이름이 떠도는 가운데 전주시가 공직영 작가를 고발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장정철 기자

(23.6\*10.2)cm

# 새만금 국제공항 속도 빨라진다

**사전 타당성 조사 본격적 착수  
용역비 확정 등 행정절차 순조  
공항입지 시군 대승적 협력 필요  
잼버리 전 개항 ‘예타면제’ 관건**

지역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잼버리 전 개항 가능성이 높고 있다.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5억)’의 예산 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도 행정절차를 거쳐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에선 총사업비 확정과 편익 등을 산출하고,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공항 입지도 확정짓게 된다. 용역은 향후 새만금 공항 건설을 가질 때, 새만금 개발계획 등의 기존 계획과 현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 문제 등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의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군산공항·화포지구·김제공항부지 여건 분석)’에선 화포지구 경우 일부 관제 공역이 군산공항과 중첩 돼 관제권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공항 확장부지는 소음대책지역 저축이 크고, 국제공항 활용을 위해선 미군 협력이 필요하다.

또 여전히 3개 시·군 측의 여론전도 만만치 않다. 이에 최정호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입지에 대해 국토부 검토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있어선 안된다.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 문제는 시간이다. 도의 국제공항신설 로드맵 상으로 올해 사전타당성 검토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예비타당성 조사(1년), 기본

계획(1년), 기본 및 실시설계(1~2년), 공항건설(3~4년)을 거치면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오는 2023년엔 겨우 첫 삽을 뜰 수 있다.

이에 도는 예타면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 부지사는 “새만금 공항은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다”며 “특히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예타면제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에는 ‘새만금 예타면제’가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고지원 300억원인 사업은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도 이미 MP(국책연구기관 검토→정부 승인)에 반영 됐지만 국제공항은 물론, 공공주도매립, 새만금-대

야간 철도(45km) 등 다른 SOC나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예타에 발목 잡혀 있는 실정이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틈만 나면 국제공항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뛰어든 것도 세계적인 빅이벤트를 유치하면 막힌 하늘 길을 뚫을 수도 있던 희망 탓이었다. 실제 1991년 강원도는 고성세계잼버리대회를 치르면서 미시령 도로와 춘천-속초 간 잼버리 도로, 양양공항 등 교통망 확충의 전기를 맞기도 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국가원수급 VIP를 비롯한 전세계 5만명의 청소년들이 찾는 행사에 국제공항이 없는 것은 세계적 망신이다”며 “2022년 아시아·태평양 잼버리대회를 프레대회로 유치한다면 더욱 일정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 전북 혁신도시 ‘제3 금융중심지’로

## 정부, 서울·부산이여 추가지정 검토 연구용역 16일 입찰...타당성 높아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운용기관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북 혁신도시가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타운 조성사업도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전북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입찰을 16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의 타당성 및 금융중심지로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 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 지정하는 방

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선공약이다.

오는 12월까지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따른 법령상 고려사항은 물론 타당성 평가,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금융위에 납품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부산 등 2곳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2008년부터 3년마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제5차 기본계획에 전북 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방안이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이미 전북도는 혁신도시를 연기금·농생명 특화 제3의 금융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 지난 2월 중간보고회도 개최했다.

전북 혁신도시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기금운용본부 기금적립금이 2016년 말 545조원(운용인력 330명)으로 전세계 연기금 중 3위이며, 2043년에는 기금적립금이 2561조원, 운용인력은 2000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전북 지역 GRDP가 317억원에서 4522억원까지 늘어나고, 부가가치 최대 4530억원, 소비 242억원에서 2590억원, 최대 5534억원 규모의 투자증가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 340여개의 거래 기업·기관의 회의 행사 및 방문객 증가로 전북의 관광·MICE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시너지효과도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혁신도시 본사 인근에 제2사옥 신축을 위한 설계에도 이미 착수하는 등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북 혁신도시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가 조성되면 전북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01

## 평화당 도당 “도지사 후보 어디 없소”

### 도지사·시장·군수 후보없어 속타

민주평화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전북지사 후보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평화당 전북도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2일 “그동안 거론되었거나 논의되었던 도지사 후보 대부분이 불출마 입장을 밝히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도 후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의 후보가 없는 탓에 유력한 시장·군수 후보는 물론 시·도의원 후보들까지도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도내 지역위원장들과 만나서 지방선거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선관위에 등록된 평화당의 전북지사 후보는 없다. 또 시장·군수 후보의 경우에도 14개 시·군 중 후보가 넘치는 민주당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한데다, 일부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대 총선 때, 전북도에서 압승한 평화당(국민의당)이 이처럼 도지사와 시장·군수 후보난에 봉착한 것은 대선 패배와 국민의당이 분열로 절대적 지지기반을 잃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화당이 창당하면서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보다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시·도지사 출마의 길이 막히면서 동반 출마를 기대했던 유력 후보들이 평화당을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당 내에서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

사는 정동영의원과 유성엽의원이 있었다. 하지만 정·유의원 중 1명이라도 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인 공동 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된다. 때문에 평화당 도당은 그동안 정균환 전 의원과 이무영 전 경찰청장, 채수찬 전 의원 등을 만나서 출마 의사를 타진했으나, 확답을 얻지 못했다. 또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의원으로 평화당과 함께 하고 있는 군산 출신의 박주현의원을 만나 도지사 출마를 권유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이와함께 평화당은 도내 14개 시·군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후보는 차치하고라도 후보 자체가 없는 시·군까지도 있다. 실제 2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평화당 후보가 없는 시·군은 익산,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8개 지역에 이른다.

서울=김영목기자

(20.2\*8.0)cm

03

## 4당체제 재편... 범진보·범보수 ‘균형’

### 원내대표들 첫 회동 개최 4월 임시국회·개헌 논의 여당, 국회 협상 우군 얻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의 월요 회동에 참석하면서 국회는 여야 원내 4당 체제가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대표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여, 4월 임시국회 및 개헌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평화와 정의가 국회 교섭단체 등록을 하면

서 국회는 범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범 진보성향의 더불어민주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으로 여야 균형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범 진보 성향은 민주당 121석과 평화와 진보 20석, 바른미래당 내 박주현 의원 등 비례대표 3명,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민중당 김종훈의원과 무소속의 이용호순금주 의원 등 148명과 범 보수세력은 자유한국당 116명과 바른미래당(27·비례 3명 제외)과 애국당과 무소속 이정현의원 등 145명으로 재편되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 3개 교섭단체가 일을 했는데, 기대만큼 협력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각축의 장으로 변질될 측면이 있다”며 “이제 4개 교섭단체로 자동차 바퀴의

구조가 돼 한 쪽의 이탈 없이 빠걱대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이번 국회를 잘 치러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동안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란 이유로 회의 테이블에 오지 못했는데 평화당과 손을 잡고 들어오게 됐다”며 “20대 국회는 2016년 4월의 민심이 반영됐을 뿐이지 그 이후 민심 쫓아가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괴리 좁히는데 ‘평화와 정의’가 앞장 서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출발이 아주 좋은 것 같다”며 “원내대표들의 얘기를 보면 4월 국회는 법안심사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김영목기자

(20.3\*10.7)cm

# 선거용 사무소 단기임대 반짝 특수

현수막 효과 좋은 교차로 주변 등 선호  
서부신시가지 고층 임대료 500만원 ↑  
장기 보다 최대 3배 높은 가격 거래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사무소용 임대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찍이 출마를 결심 한 예비후보자들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전주지역에서는 선거 사무실 ‘명당 쟁탈전’이 치열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거 사무실을 등록해야지 건물에 현수막을 게재 할 수 있어 홍보가 가능한 데 위치가 좋은 사무실은 한정돼 있다. 뒤늦게 이른바 선거명당을 차지하려는 출마예정자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무실 구하기에 나서고 있지만, 목 좋은 자리는 임대계약이 체결된 지 오래다.

전주지역의 경우 출마예정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거사무실 입지 지역은 백제로와 화산로,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주변 건물, 서부신시가지 등이다.

선거용 사무실은 일반 사무실과 달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건물주가 비싼 임대료를 책정,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단기계약이라는 특성상 장기임대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의 빌딩이나 건물은 웃돈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명당 자리로 꼽히는 전주 완산구 서신동, 중화산동, 효자동, 평화동 지역의 사무실 시세를 보면 3.3㎡당 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만 100~300만원 내외다.

여기에 서부신시가지 내 사무실의 경우 층고가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 400~500만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김제, 익산, 군산 등 타 지역의 유동 인구가 많은 사거리 대형건물의 경우 6개월 계약에 최고 5천만원 이상 호가가 나오고 있는 등 선거철이란 특수를 힘입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당선 확률이 높은 일부 후보를 지지하는 건물주가 저렴한 가격에 사무실 임대를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웃돈을 주고서라도 명당 자리를 차지하려는 후보가 많다”며 “후보자 입장에서 높은 가격이라도 좋은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계약에 나서고 있어 부동산 침체로 수요가 없던 상황에 지방선거로 인해 지역 부동산업계가 반짝 호황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영관기자**



01

## GM군산공장 폐쇄 '지역산업' 침몰

조선소가동중단 이어 악재  
고용 하락·지역상권 타격  
연관 산업 도미노 폐업 우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군산지역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산업에도 큰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전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군산시 고용 동향과 이직자의 일자리 이동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지역의 지난해 하반기 고용

률은 52.6%까지 추락했다. 1년 전에 비해 2.5%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고용률 61.4%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이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에 따른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에 이어 올해 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석된다.

보고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적 인원(회합퇴직, 계약해지, 폐업 등)은 약 6000~1만명으로 추정했으며 부동산, 지역상권, 연관 서비스 연쇄 침체에 따른 추가 폐업 및 실직규모도 2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산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군산지역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중순부터 급격하

게 감소해 올해 2월 30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8.3% 급감했다. 2015년 해당 업종 종사자가 4000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3년만에 10분의 1로 줄은 셈이다.

자동차 산업 역시 지난 2012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섰지만, 올해 2월 4739명으로 2207명(31.5%)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직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 소비 부진에 따른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전북도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연기자·red@

/편집=최병호기자·hoyad27@

(30.6\*6.5)cm

02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시계 추 빨라진다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 배정  
전문적 분석 공항 입지 확정  
잼버리대회 이전 개항 논리  
도, 예타조사 면제 총력 대응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이 지난날 말 국토부에 최종 배정됐다.

당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은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됐으나 기재부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어 놓으면서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배정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행정절차 추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항공수요조사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곧바로 사전타당성조사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계약 등의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 올해 안에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총사업비 확정 및 편익 등을 산출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 어디에 공항을 배치해야 가장 효용가치가 있는가를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해서 공항의 입지도 확정하게 된다.



2일 도청에서 최정호 정무부지사가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사항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장태엽기자·mode70@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이전 개항을 위해서는 예타면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타가 면제되면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1년 공항건설

착수에 들어가 2023년 잼버리대회 이전 개항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도는 예타면제 논리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김제공항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당시 김제공항이 착공까지 했다는 것은 전북에 공항 필요성이 이미 입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새만금에서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 지금과는 상황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면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신속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jw@

(24.5\*18.1)cm



# 민주당 면접 마친 송하진-김춘진...승자는

**‘재선 도전’ VS ‘3선 국회의원’**  
**도지사 예비후보 경선레이스**  
**중앙당 면접심사 마치고 본격**  
**이번주내 최종 경선일 나올 듯**

6·13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송하진지사와 김춘진 전 국회의원이 2일 오후 중앙당 면접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레이스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중반 최종 경선 일정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경쟁 열기 또한 더욱 가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지사와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 면접심사에 참석했다.

이에 김 의원이 오후 3시50분부터, 송 지사는 오후 4시부터 10분 가량 면접을 진행했다. 3선 국회의원 경험과 전주시장에 이어 현 지사인 이들도 면접심사의 민감한 질문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는 후문이다.

먼저 면접을 진행한 김 의원에게는 출마의 변과 송 지사의 장단점, 그리고 새만금사업과 군산 GM공장문제 등의 전북 현안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면접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중앙에서의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낙후되고 있는 전북을 내버려 둘 수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도 더욱 협의해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송지사의 장점에 대해 세계 챔피언 대회 유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쟁력에 대해서 송 지사는 4년 도정을 이끄는 동안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특히, 공약이행이 잘되지 않았다. 그래서 도민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말했다”며 “반면, 저는 중앙

정치 경험과 새로운 도정에 대한 비전·열정이 있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송 지사에게는 재선도전에 대한 이유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데 역할, 새만금 등 낙후 전북을 위한 방안 등의 견해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사 역시, 이날 면접 후 기자와 만나 “나를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 최다득표율을 선사하지 않았으나 그 중심이 제가 있었다고 자부

한다”고 밝혔으며, “행정을 위해 태어났고, 행정의 전문가로서 낙후 전북을 탈피하는 데 이른바 ‘송하진 적임자론’을 설파했다”고 답변했다.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질문보다는 새정부가 새만금에 관심이 지대한 만큼, 새만금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저에게 더 노력해 달라 하는 면접위원들의 권유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군산 GM공장과 관련해서는 “본질적으로 공장 폐쇄 이전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도민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이와 동시에 공장 정상화와 전북경제

의 체질을 강화 하자는 내용을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면접을 마친 민주당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도덕성·업무수행능력, 정책성과 당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광역단체장 공천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지사의 경우 사실상 경선이 확정됐고, 오는 9일부터 22일 사이에 관리당원 조사 및 안심번호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경선날짜는 이번주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24.4\*22.5)cm

# 민주당 도당, 기초단체장 결선투표설 공식 부인

지역정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결선투표설에 대해 도당 공천관리위가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도당 공관위 한 관계자는 “지난 달 31일 공

관위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결선 투표와 관련한 안건으로는 회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선 결선투표 시행여부에 대해 뭐라 해줄 말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의 경우 앞서 정해진 공천 방식을, 경선 관련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변경할 때 후보자간 이해가 상충한다는 점에서 공천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18.2\*4.5)cm

## 민주당도당,익산지역위 시장경선 예비후보 토론회 홍보 뒷짐 ‘그들만의 리그’ 전략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익산갑과 을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한 시장경선을 위한 예비후보 합동토론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전략시켰다.

익산갑과 을 지역위원회는 2일 모현도서관에서 익산시장 예비후보 6명을 대상으로 당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익산지역위원회가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정책토론회를 가진 것은 민평당에 빼앗긴 익산시장을 반드시 탈환하기 위해 예비후보들이 후회 없는 공정경선을 치르게 하고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장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그동안 경선에서 패한

후보들이 등을 돌려 민심이반을 보여 왔지만 이번 선거는 공정경선으로 본선에서 모두가 적극 돕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날 6명의 후보들은 “경선에서 패해당 후보를 위해 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할 정도로 익산시장 탈환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는 경선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펼쳐 잡음을 사전에 없도록 하겠다는 지역위원회의 고심이 담겨있다.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인 김대중·김영배·황현 전 도의원과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 전완수 전 문재인대통령 법률특보(익산변호사회장), 정현욱 원광대 교수는 폐석산 활용문제,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역세권 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현안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처럼 후보 간 정책토론으로 유권자에게 미리 민주당 후보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에도 후원한 전북도당은 홍보에 뒷짐을 저 지역위원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북도당은 “익산 뿐 아니라 김제와 고창에서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들이 당원과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익산과 김제, 고창 지역위원회의 후보 간 정책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는 평가 속에 전북도당의 역할에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장병윤기자·argus@

## 군산GM 사내 비정규직 “정규직 인정해달라”

###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제기 협력업체 3곳 198명 해고통지받아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5월 폐쇄 결정으로 실직한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법원에 한국지엠 정규직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내 협력업체 3곳 근로자 200여명 가운데 150명은 지난 달 31일자, 48명은 5월 1일자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GM 군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식도동 군산공장 앞 집회에서 “정규직 지위확인, 부당해고 철회, 체불임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현철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106명이 참여했다. 오는 6월에는 24명이 더 참여할 예정이라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된 근로자들은 사내 협력업체 3곳과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지엠과 근로자 파견관계여서 한국지엠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로 고용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지엠은 사내 협력업체 3곳이 진행한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의 도움을 받아 출근하는 날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곤·김세희기자

(11.9\*10.1)cm



# “GM, 군산공장만 포기, 되돌릴 방법 없어 답답”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제네럴모터스(GM) 구조조정 사태와 관련해 군산공장만 포기하는 이른바 ‘군산 패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정호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2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최근 정부부처와 GM측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여전히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다.

최 부지사는 “현재까지는 (정부와 GM간 협상과정에서) 군산공장은 제외한 채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미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이를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마지막까지 군산공장 정상화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민들의 기대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전날 집단 해고된 군산공장 사내 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했다.

최 부지사는 “(GM 사태로) 가장 어려운 게 비정규직인데 그들이 공식적으로 해고돼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앞서 비대위축이 건 의한 지원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그 결과를 이번 주중 다시 만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해 맨투맨(일대일)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는 빠르면 다음 주중 결론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지사는 “4월 둘째 주중 경제장관 회의가 예정됐고 최근 군산을 찾은 현장실사 단도 눈과 귀로 그 실상을 직접 보고 공감대

**최정호 도 정부부지사 기자 간담회서 답답함 토로  
“정부-GM간 협상은 군산 재가동 전제로 진행돼야”  
“사내협력사 집단해고 안타까워… 곧 지원책 제시”**

를 표현만큼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 “지정된다면 관련사업(군산경제 회생

방안)이 신속히 국책사업화 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3조 원대에 달하는 군산경제 회생사업안 80여

건을 건의한 상태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도 지난달 15일 기자 간담회 석상에서 “그동안 정부측은 단 한 번도 군산공장 정상화 여부에 관해서 답을 준 적이 없다”는 말로 군산 패싱을 경계한바 있다.

정부측 입장이 뒤틀리, 특히 군산공장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24.3\*20.2)cm

#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 올해 안 결정

정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곧 착수

전북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자체간 유치경쟁 자제” 당부  
“2023년 챔버리 이전 개항토록 정부 설득에도 주력”

정성학 기자

올 연말께 가장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정호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2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부로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5억 원이 확보돼 빠르면 이달 중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계획대로라면 그 결과는 올 12월께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국가적 항공정책과 맞는지, 맞다면 얼마나 투자해야할지 등을 종합 검토하게 된다. 특히, 어디에 공항을 건설하는 게 좋은지를 집중 분석하게 된다.

최 부지사는 이를 놓고 “공항 입지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그 최적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전북도는 그 결정을 믿고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항 입지 결정을 앞두고 (과거처럼)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본다”는 말로 공항 유치전을 경계했다.

최 부지사는 “만약 그럴 생각(공항 유치전에 뛰어들 계획)이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전북발전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더 생각해줄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그는 2023년 새만금 세계 챔버리대회 개막에 앞서 개항을 목표로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북도 입장을 다시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이후 추진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오는 2021년 7월 착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최 부지사는 “챔버리 이전에 공항을 개항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며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1996년 가정전북권 신공항 프로젝트로 시작됐지만 번번이 이런저런 난기류에 휘말려 무산된 상황이다.

당시 정부는 김제 백산일원에 공항부지까지 사들였지만 3년만에 전북권 항공수요가 부족해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좌초됐다. 덩달아 공항부지는 현재까지 임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안으로 만-군 공용인 현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이 또한 군사기밀 노출을 우려한 주한 미공군측 반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한-미 정부 당국자들이 10여차례나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모두 불거졌다.

현재는 새만금 일원이 새로운 후보지로 떠오른 상황이다.

(26.8\*9.5)cm

## 전주 남원 완주 부안,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한국 메니페스토 운동본부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정보 공개  
군산 진안 무주 순창 고창 A 등급 받아  
전북 공약이행률 75.03%,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아

전주시와 남원시, 완주군, 부안군이 민선 6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가장 높은 SA 등급을 받았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2일 110일간 진행한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결과를 밝힌 뒤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4개 지자체는 총점 100점 만점에 85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총점 80점을 넘어 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군산시와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등 5곳이었다.

정읍시는 공약이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통 지자체로 분류됐다.

메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도내 14개 지자체 장의 785개 공약 중 완료공약은 172개, 이행후 계속 추진 공약은 417개 등 75.03% 완료, 이행률을 기록했다. 또한 정상추진은 175개, 일부 추진은 9개, 보류는 1개, 폐기는 9개, 기타 쟁점 공약은 2개로 확인됐다.

공약이행을 위해 각 지자체는 필요 예산 10조 1,801억8,000만원 중 7조 2,614억1,300만 원을 확보해 각종 사업을 추진, 재정확보를

71.33%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2017년까지 집행된 재정은 4조 4,656억2,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메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도내 기초단체장의 공약 가운데 새만금배후 복합물류단지 기반구축 사업은 보류됐으며 육가공센터 도축장 건립, 한국액산산업 진흥원 설립,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유치, 방폐장피해 보상법안 조례제정 등은 폐지됐다. 또한 옥정호권역 관광특구 조성과 제2순환도로 조기개통 등은 쟁점사업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지리산 산림복합단지 조성고 이서면 답수어 연계 6차 산업화,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장수 종합운동장 야간 조명 시설 등은 필요재정이 존재함에도 재정확보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전북 지역 기초단체의 공약이행률(75.03%)은 전국 평균 71.24%를 웃돌았으며 대구(84.30%), 서울(80.62%), 부산(78.35%), 광주(76.00%)에 이어 다섯번째로 높았다.

/서울=강영희 기자

(19.9\*10.1)cm

## 민주당 경선 시행세칙 의결, 22일까지 경선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2일 6·13 지방선거 공역단체장(시·도지사)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방선거 시행세칙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오후 1시 추미애 대표가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지방선거 시행세칙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경우 송하진 현 지사와 김춘진 전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2명이 경쟁하는 만큼 원샷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 지사와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앙당에서 면접심사를 받았다.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및 지방의원 후보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북도당에서 면접 심사를 받는다.

민주당은 오는 20~22일까지 경선을 완료한다는 원칙은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시·도지사 경선 중 1회에 한해 정책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14.0\*6.4)cm

03

## 전북도의회 오늘 의장 보선

전북도의회는 3일 제352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선출한다.

이날 오후 2시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의장단 선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현 의장과 정호영 제2 부의장, 장명식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학

수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일단 의장의 경우 경선보다 추대방식을 시도 하되 실패시 사실상 다수결에 의한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의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조병서 부의장과 양용모 의원간 2파전이 예상된다. 김경섭 기자

(11.7\*4.2)cm

03

## “‘부인 갑질’ 고창군수 공천 배제돼야”

### 피해자, 민주당 도당에 청원

〈속보〉고창군수 부인 갑질 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고창군수와 부인의 행태를 일벌백계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했다.

고창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김상례 부면장은 2일 김운덕 도당위원장과 박희승 공관위원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 부면장은 “현직 군수와 그 측근들에게 찍힐까봐 동생과 왕따로 생활한지 3년이 됐다”며 “아직도 공직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생각 있는 사람들은 ‘고창의 이명박과 최순실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장이 제왕적으로 군림하기 때문

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며 “취임 후 임기 4년 간 여성팀장이 4명이 바뀌었다. 군수와 부인은 한사람의 인격을 처참히 짓밟고도 선거와 결부시키며 피해가려는 모습은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고 했다.

김 부면장은 “더 이상 권력을 가진자들의 권력 놀음에 희생을 당하는 공무원이나 서민들이 없도록해야 지자체도 투명하고 깨끗해진다”며 “이러한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면 민주당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일은 명약관화한 일이다”고 했다.

이어 “군단위의 작고 노인인구가 집중된 곳은 단체장들의 권력 앞에 모두 굴복해 그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고창군수와 부인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했다. /장병운기자·argus@

(12.1\*9.9)cm